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와 한일관계의 재구축*

김봉길**

| 목 차 |

I. 서론	한중일의 동향
II.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무역·분업 구조	IV. 거대 FTA와 한일관계의 재구축
III. 동아시아 지역의 거대 FTA와	V. 결론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분업구조의 현황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의 움직임과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한중일 3국의 FTA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다국 간 협력의 틀을 활용한 새로운 한일 협력관계의 구축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통상질서 수립을 위한 거대 FTA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은 TPP와 RCEP 등 거대 FTA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통상질서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정치적 인 측면에서의 협력과 대립이라는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내 생산네트워크와 공급사슬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아시아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62-H00001).

** 일본 도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

지역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지정학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TPP와 RCEP의 통합을 추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TPP와 RCEP 등 거대 FTA가 세계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거대 FTA가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도 작용하고 있어 역내 안정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일 양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향후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 양국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및 다자 간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주제어: 거대 FTA, 한일협력, TPP, RCEP, FTAAP

I. 서론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질서 형성을 위한 패권 경쟁에 의해 정치·안전보장 측면에서의 긴장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거대 FTA(Mega FTA)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을 위한 움직임의 가장 큰 특징이 경제적인 목표와 함께 정치·안전보장의 목표가 동시에 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관계를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로 보는 견해(馬田 2015, 12-14)가 확산되고 있는 등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협조와 경쟁의 게임이 TPP와 RCEP를 통해 전개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도 이러한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TPP와 RCEP의 출범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질서 형성은 보다 거시적 차원의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의 틀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대 FTA 등 새로

운 통상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고, 동시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대 FTA가 역내 지정학적 환경 및 무역·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경쟁과 협력’의 틀 속에서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Athukorala & Yamashita(2006, 233-256), Ernst & Luthje(2003, 1-15) 등이 지적한 것처럼 동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역내 생산네트워크와 공급사슬(supply chain)’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역내 기업의 경우 역내 생산네트워크와 공급사슬의 효율화를 위한 경제통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0년대 이후 TPP와 RCEP와 같은 거대 FTA가 가속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국제분업구조와 통상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역사인식 문제,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금년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3국 간의 긴장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는 하나 완전한 회복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인한 정치·안전보장 측면에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질서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통상정책은 넓은 의미로 경제적 목표와 정치·안전보장 측면에서의 전략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무역·투자 등 경제면에서의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국가 간의 협력관계를 촉진하게 되고, 이것이 안전보장 측면에서의 위기에 대한 억지효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지역의 이러한 지정학적·지경학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은 TPP와 RCEP, 그리고 한중일 FTA 등 거대 FTA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역내에서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상호의존과 정치·안

전보장 측면에서의 대립이라는 ‘협조와 대립’이라는 이중구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제적 측면에서의 한일관계와 관련한 논문은 주로 산업(사공목 외 2013), 금융(김정식 2015, 262-280), 국제 분업 및 한일 FTA(김도형 2007, 61-94; 김봉길 2011, 1-76) 등 각 분야별 협력관계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 움직임이 역내 지정학적 환경변화와 함께 역내 생산네트워크와 역내 공급사슬, 그리고 역내 무역·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한일 협력관계의 재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한일 협력관계의 재구축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경제권 형성과 관련한 다국 간 협력의 틀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의 경우 역내 생산네트워크와 공급사슬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편, 역내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중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동 지역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입장을 활용한 한일 협력관계 구축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먼저 동아시아 지역 및 한중일의 무역·분업구조에 대해서 고찰한다. 다음으로 미·중 관계에 주목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의 움직임과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동 지역에서의 TPP와 RCEP 등 거대 FTA와 관련한 한중일 3국의 FTA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새로운 한일 협력관계의 구축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를 모색한다.

II.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무역·분업구조

1.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무역·분업구조의 특징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인 경제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역내 투자 및 무역을 확대해 왔다. 동아시아의 역내 무역비중을 보면,¹⁾ 1990년의 43.1%에서 2012년에는 49.5%까지 확대하여, EU 28개국의 59.1%보다는 낮으나 NAFTA²⁾의 39.3%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유럽 단일시장이 발족한 1992년 시점에 역내 무역비중이 이미 68.4%로 이후 점차 역내 무역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동아시아의 경우 제도적인 경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역내 투자 및 무역을 통한 역내 생산네트워크와 공급사슬을 구축하고, 역내 수직적 분업구조를 확대해 왔다. 특히, 역내 수출비중을 보면 동아시아가 49.5%로 EU의 49.4%, NAFTA의 22.2%보다 높다. 이처럼 역내 무역비중이 높은 것은 2000년대 들어와 중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역내 생산거점과 시장으로서의 존재감이 급속히 높아지고, 무역액이 급속히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동아시아의 무역구조를 보면, 북미와 유럽 등 역외 국가·지역과의 무역은 최종재의 무역비율이 높고, 역내무역은 부품·소재 등 중간재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의 역내무역의 특징은 소재·부품·가공품의 비율이 높고, 최종재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부품의 역내 무역비율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최종소비재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부품·가공품의 역내 수출비율을 보면(2013년 기준), 동아시아가 65.3%인 데 비해, NAFTA가 46.7%, EU가 52.0%로 동아시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역내무역을 견인하고 있는 업종이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을 중심으로 한 중간재라고 할 수 있다. 최종재의 경우를 보면, 동아시아가 29.7%, NAFTA가 37.4%, EU가 41.2%로 동아시아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 동아시아 지역의 범위는 일본, 한국,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 베트남이고,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EU는 27개국이다. 여기서의 정의는 일본 산업경제연구소의 통계인 'RIETI-TID'의 기준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

2)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의 가맹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이다.

<표 1> 주요 지역별 산업별 역내 무역비율 (단위: %)

	동아시아			NAFTA			EU27		
	최종재	중간재	소재	최종재	중간재	소재	최종재	중간재	소재
1985	30.1	47.7	22.3	38.4	47.4	14.2	41.1	49.4	9.5
1990	37.2	54.2	8.7	37.6	52.2	10.2	43.8	51.1	5.1
1995	38.2	57.1	4.7	39.8	52.2	7.9	43.7	51.8	4.4
2000	35.6	60.5	4.0	41.7	50.2	8.1	45.2	50.5	4.3
2005	31.8	63.9	4.3	38.3	48.2	13.5	45.3	49.8	4.9
2007	29.5	65.7	4.8	38.6	46.7	14.7	43.4	51.5	5.1
2008	28.6	66.0	5.4	35.7	45.2	19.1	42.6	51.6	5.8
2010	29.7	65.3	5.0	38.6	46.1	15.3	43.0	51.2	5.9
2011	29.5	64.7	5.8	36.2	46.7	17.0	41.0	52.4	6.5
2012	30.4	64.0	5.5	37.4	46.9	15.8	40.7	52.4	6.9
2013	29.7	65.3	5.1	37.4	46.7	15.9	41.2	52.0	6.8

▪ EU의 경우 2010년부터는 28개국임

▪ 일본 경제산업연구소 'RIETI-TDI 201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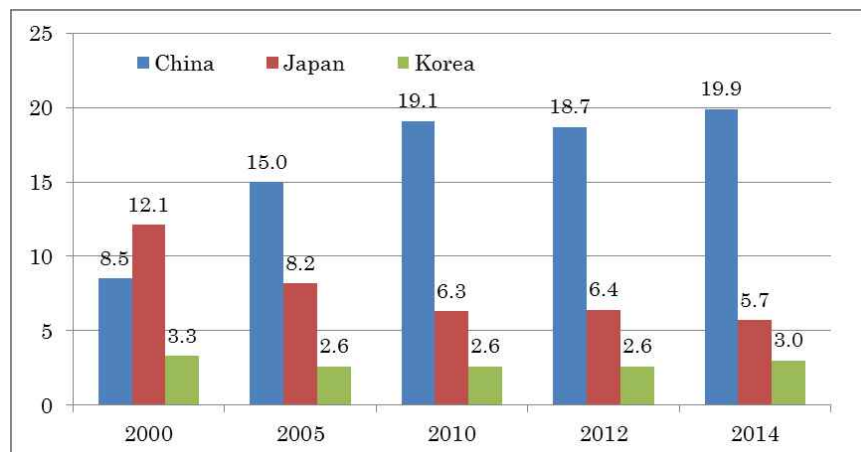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동아시아의 경우 중국과 아세안이 일본,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한 최종제품을 북미,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역내 수직분업구조가 형성·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동아시아와 미국과의 무역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무역상대국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일본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미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국별 비중을 보면, 일본은 2000년의 12.1%에서 2014년에는 5.7%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고, 한국은 같은 기간에 3.3%에서 3.0%로 다소 낮아졌다. 중국의 경우는 2000년의 8.5%에서 2014년에는 20.0%까지 높아졌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적자 중 46%가 대 중국 무역적자이고,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안전보장 측면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상호 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중일 분업구조의 특징

한중일 간의 역내 무역의존도는 1990년대 들어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 중국의 WTO 가맹 등으로 급속히 증가해 왔다. 3국 간의 역내 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0년의 20.3%에서 2014년에는 21.4%로 증가하였고, 수출이 19.4%, 수입이 25.3%를 차지하고 있다. 역내 수입비중이 수출비중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중국의 역내 수입비중이 역내 수출비중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중일 비중 (단위: %)



▪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2000-2014년)

3국 간의 무역구조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에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중국이 양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중요한 중간재의 수입국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한중일 3국 간의 무역의존도는 역내 공급사슬 및 생산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 지난 20년간 급속히 확대되어 왔고, 그중에서도 중

국의 비중이 급속히 상승하였다. 일본은 수입에서, 한국은 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중국의 경우는 일본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고, 한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지난 10년 동안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는 비교적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3> 한중일 간의 역내 무역구조 (단위: %)

	일본				한국				중국			
	대한국		대중국		대일본		대중국		대한국		대일본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0	6.4	5.0	2.2	5.1	19.4	26.6	0.9	3.2	-	0.4	14.7	14.2
1995	7.1	5.1	5.0	10.7	13.6	24.1	7.3	5.5	4.5	7.8	19.1	21.9
2000	6.4	5.4	6.3	13.5	11.9	19.8	10.7	8	4.5	10.3	16.7	18.4
2002	6.9	4.6	9.6	18.3	9.3	19.6	14.6	11.4	4.8	9.7	14.9	18.1
2004	7.8	4.9	13.1	20.7	8.6	20.1	19.6	13.2	4.7	11.1	12.4	16.8
2006	7.8	4.7	14.4	20.5	7.5	17.4	24.7	15.4	4.6	11.3	9.5	14.6
2008	7.6	3.9	16.0	18.9	6.7	14	21.7	17.7	5.2	9.9	8.1	13.3
2010	8.1	4.1	19.4	22.1	6.1	15.1	25.1	16.8	4.4	10.0	7.6	12.8
2011	8.0	4.7	19.7	21.5	7.2	13.2	24.2	16.5	4.4	9.3	7.6	11.2
2012	7.7	4.6	18.1	21.3	7.1	12.4	24.5	15.6	4.3	9.2	7.4	9.8
2013	7.9	4.3	18.1	21.7	6.2	11.6	26.1	16.1	4.1	9.4	6.8	8.3

•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2000-2014년)

3국 간의 역내 무역의존도를 국별로 보면(2013년 기준), 한국의 역내 무역의존도가 3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수출이 32.3%, 수입이 27.7%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4년의 한국의 대중 수출입 비중은 22.8%로 미국과 EU를 합친 것보다(22.5%) 높은 수준이고, 대중 수출금액은 1,453억 달러로 미국과 일본, EU를 합친 금액(1,542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일본은 역내 수출입비중이 각각 26.0%, 26.0%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각각 10.9%, 17.7%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역내 무역의존도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여 중간재의 수

출비중이 2000년의 38.4%에서 2013년에는 70.4%로 급증하였고, 총 수출금액의 비중도 2000년의 10.7%에서 2013년에는 25.5%로 급증하였다. 또한, 중국의 역내 수입비중이 수출비중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중국이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부품·소재 등의 중간재와 기계설비 등의 자본재를 수입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유럽과 북미로 수출하는 수직분업구조가 형성·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3국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의 공급거점(manufacture hub)과 중심시장(purchasing hub)이라는 2중의 허브(dual hub)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역내 무역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기업은 아세안과 중국을 중요한 생산기지로 활용해 왔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중국의 생산거점에 부품·소재를 수출하고, 완성품을 생산하여 국내로 역수입하거나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해 왔다. 실제로 3국 간의 역내 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전기·전자부품, 일반기계 및 부품, 소재 등의 중간재와 기계설비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4> 한중일 간의 산업별 수출비중 (단위: %)

수출국 상대국	일본			한국			중국			ASEAN4			
	2000	2005	2013	2000	2005	2013	2000	2005	2013	2000	2005	2013	
소재	일본	-	-	-	27.0	26.0	18.4	27.5	21.9	14.4	24.9	18.9	13.8
	한국	14.9	21.4	21.4	-	-	-	17.5	20.2	12.0	11.0	11.1	6.9
	중국	27.2	40.0	44.9	9.9	29.5	40.3	-	-	-	10.3	12.0	27.8
	ASEAN4	9.23	4.1	3.8	8.9	5.4	20.1	10.0	7.7	6.2	8.7	13.7	10.6
중간재	일본	-	-	-	23.6	19.3	13.4	23.5	20.7	13.9	32.5	27.5	21.2
	한국	17.9	20.2	19.6	-	-	-	10.5	13.0	11.9	11.8	9.5	8.7
	중국	24.7	50.7	46.0	38.4	66.2	70.4	-	-	-	14.5	30.2	44.4
	ASEAN4	14.7	16.3	26.6	16.3	13.0	14.5	8.9	11.9	14.9	15.9	22.9	21.0
최종재	일본	-	-	-	23.0	11.1	9.5	24.5	21.2	18.5	27.3	19.5	18.8
	한국	7.0	9.0	7.8	-	-	-	3.7	4.6	4.6	2.7	3.4	3.9
	중국	8.4	31.9	30.5	7.7	26.0	24.8	-	-	-	3.3	12.6	20.7
	ASEAN4	8.7	9.4	13.3	5.2	5.0	7.4	2.9	3.7	7.0	5.4	10.4	17.9

▪ 일본 경제산업연구소의 'RIETI-TDI'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표 4>에서 보면, 일본과 한국의 부품 및 가공품의 대중 수출비중이

2000년대 들어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과 2013년의 일본과 한국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비중을 보면, 한국이 38.4%에서 70.4%로, 일본이 24.7%에서 46.0%로 급증하고 있다. 한편 동 기간의 중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최종제품의 수출비중을 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3.7%에서 4.6%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은 24.5%에서 18.5%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3국 간의 삼각무역관계는 중국이 2001년 WTO 가맹 이후 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공급거점과 시장으로 급성장하면서 심화되어 왔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북미와 유럽 등 선진경제의 회복지연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대중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이러한 3국 간의 무역구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Ⅲ.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와 한중일의 FTA 정책

1. 가속화하는 거대 FTA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21세기에 들어와서이지만, 10년 동안에 ASEAN+1을 중심으로 한 FTA가 완성되는 등 급속한 진전이 있었다. 동 지역에서 이처럼 FTA가 급속히 확대된 것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FTA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싱가포르, 한국을 비롯하여 그동안 FTA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중국이 경쟁적으로 FTA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FTA보다는 ASEAN을 중심으로 ASEAN+1, 혹은 ASEAN 각국과의 2국 간 FTA의 형태가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이 거대 FTA보다 2국 간 FTA를 선호한 것은 우선 FTA 후발국으로서 보다 빠른 협상과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보호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였다. 또한 ASEAN이 FTA의 허브가 된 것은 ASEAN이 AFTA(ASEAN

FTA)에 의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온 FTA의 선진국이고, 또한 ASEAN이 신흥시장으로서의 중요성과 발전가능성 크다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작용하였다(石川 2012, 74-89). 이처럼 ASEAN이 동아시아에서 2국 간 FTA의 허브가 되면서, RCEP 등 동 지역의 거대 FTA 구상에서도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제도적 경제권은 ASEAN이 FTA 체결의 추진력이 되어 2010년에는 ASEAN+1 형태의 FTA 네트워크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21세기 10년간이 동아시아의 제도적 경제권의 제1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제도적 경제권 형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미국이 제시한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³⁾이라고 하겠다. 미국은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로 TPP를 생각하고 있고, 또한 TPP를 통하여 아시아 주요국과 제도적 연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馬田 2015, 4-20). 또한 미국은 TPP 참가국을 APEC 가맹국으로 확대하여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TPP 협상 참가를 강력히 요청한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라 하겠다. 결국 일본이 TPP 협상에 참가를 표명하면서(2010. 3) 동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의 제도적 경제권 형성의 움직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일본이 미국 주도의 TPP 협상에 참가를 표명하면서 ASEAN+3(한중일)에 의한 동아시아 FTA(EAFTA)를 주도해 왔던 중국이 ASEAN+6에 의한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CEPEA)을 받아들일게 되고, 2012년에는 EAFTA와 CEPEA가 통합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⁴⁾이 탄생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의 급부상과 이에 따른 파워밸런스의 이동으로 인해 정치·안전보장 측면에서 긴장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을 위한 주도권 싸움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는

3) TPP(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는 2010년 3월부터 8개국에 의한 협상이 시작되어 일본은 2013년 7월부터 12번째로 협상에 참가하였다.

4)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2013년 5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어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내 경제질서를 둘러싼 헤게모니경쟁이 격화되면서, 거대 FTA 형성과 관련한 ‘작용-반작용의 동학’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TPP와 RCEP라는 거대 FTA의 형성·전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 일본, 중국은 TPP와 RCEP를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과 안전보장 측면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의 행방과 관련해서도 TPP와 RCEP가 대체관계(경쟁관계)인가 보완관계(협조관계)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TPP와 RCEP는 대조적이라고 할 정도로 내용이 달라 두 거대 FTA가 통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다. 물론 TPP 협상이 RCEP 협상보다 빨리 합의에 도달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TPP가 조기에 발효되고 참가국이 늘어나면 TPP가 RCEP를 흡수 통합하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으로서도 RCEP가 TPP보다 무역자유화 수준이 낮아 ASEAN 가맹국들이 TPP보다는 RCEP를 선호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주요 FTA의 경제효과 (단위: 10억 달러, %)

	TPP12	TPP16	RCEP	FTAAP
미국	76.6(0.38)	108.2(0.53)	-0.1(0.00)	295.2(1.46)
일본	104.6(1.96)	128.8(1.41)	95.8(1.79)	227.9(4.27)
중국	-34.8(0.20)	-82.4(0.48)	249.7(1.45)	699.9(4.06)
한국	-2.8(-0.13)	50.2(2.37)	82.0(3.87)	131.8(6.23)
ASEAN	62.2(1.67)	217.8(5.86)	77.5(2.08)	230.7(6.2)

· 2025년의 GDP 증가액이고, 괄호 안은 2007년을 기준으로 한 GDP 증가율임.

TPP 16은 기존의 12개국에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함

· P. A. Petri, M. G. Plummer(2014, 40-43)

현재 APEC 참가국들이 FTAAP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FTAAP 체결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 TPP, RCEP, 그리고 한중일 FTA 등의 거대 FTA 협상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FTAAP로 가기 위한 로드맵도 TPP 경로, RCEP 경로가 모두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TPP 협상이 먼

저 타결됨으로써 TPP가 한발 앞서가고 있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TPP 발효로 인해 입는 피해가 참가국이 늘어남에 따라 급증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RCEP, FTAAP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보면 미국, 일본보다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거대 FTA의 움직임은 보면, 일본과 EU의 FTA 협상(2013. 4), 미국과 EU 사이의 TTIP(환대서양 무역·투자 파트너십) 협상(2013. 7) 등이 진행되고 있는 등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북미, 유럽 등 각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FTA 협상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WTO가 새로운 통상규정 제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러한 거대 FTA 협상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세계 무역·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7> 거대 FTA의 경제적 비중 (2013년 기준)⁵⁾

	인구	GDP	무역		
			수출	수입	합계
한중일 FTA	22%	20%	21%	18%	20%
TPP(12개국)	11%	37%	25%	30%	27%
RCEP(16개국)	48%	28%	32%	29%	31%
FTAAP(21개국)	39%	56%	47%	51%	49%

2. 한중일의 FTA 정책

한중일 3국은 현재 진행 중인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제도적 경제권 형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이고, 특히 한국과 일본은 TPP, RCEP, 한중일 FTA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통합하여 FTAAP를 이끌어야 하는 핵심국가라고 할 수 있다.

5)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WITS). <http://wits.worldbank.org>. (2014년 11월 20일 검색)

(1) 한국의 FTA 정책

한국은 WTO에 의한 다국 간 협상을 통한 무역확대를 통상정책의 기본으로 해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한국은 양자 간 FTA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중심의 제도적 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의 역할을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한국은 양자 간 FTA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고, 2014년에도 중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 혹은 발효시켰다. 특히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FTA를 타결함으로써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의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FTA의 확대에 의해 한국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FTA 발효국과의 무역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한미 FTA 발효로 FTA 무역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이후 2014년에는 중국, 뉴질랜드와의 발효로 60%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RCEP, 한중일 FTA, GCC(걸프협력회의)와의 FTA가 발효되면 FTA 무역 비중은 8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미국과의 FTA 발효로 50%를 넘어섰고, 현재 협상 중인 FTA가 완료될 경우 83.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그동안 한중 FTA의 우선 타결 등을 이유로 TPP에 대한 공식 입장을 유보해 왔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유리한 입장을 활용해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거대 FTA 협상에 대해서는 여유를 갖고 참여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다. 특히, TPP 참여에 대해서도 한국은 TPP 참여국 가운데 이미 10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TPP 협상의 진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다소 부정적인 전망도 이러한 FTA 정책을 유지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다만, 한국 정부는 ‘신 통산 로드맵’(2013)에서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RCEP와 TPP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때까지도 한중 FTA, 한중일 FTA를 기초로 해서

RCEP와 TPP를 중개하겠다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유지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예상보다 빨리 TPP 협상에 참여하였고, TPP 협상도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에 도달하면서 한국도 FTA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은 2015년 9월에 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대내적으로 TPP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PP 전략 포럼’을 발족하는 등 TPP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의 TPP 참가는 이미 TPP 참가 12개국 중 10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라 개별 회원국과의 협상도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의 TPP 참가는 한일 FTA의 성격도 있어 일본과의 협상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RCEP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이미 한중 FTA를 체결하였고, ASEAN과도 FTA를 발효한 상태라서 TPP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RCEP, TPP 등의 거대 FTA 움직임과 관련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통상정책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RCEP 및 한중일 FTA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참가하지 않은 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기존의 2국 간 FTA를 중심으로 한 FTA 허브로서의 위치를 확보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통상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통상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중국의 FTA 정책

중국은 2001년 WTO 가맹 이후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FTA 발효 혹은 협상 중인 국가·지역을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FTA 정책의 배경에는 WTO 가입을 계기로 FTA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환경이 정비되었다는 것, 세계적인 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이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주변국들의 경계심과 견제가 심해지면서 중국으로서는 ASEAN 등을 중심으로 주변국·지역과의 관계를 개선

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면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⁶⁾

중국의 FTA 정책을 보면 자원 확보 등의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정치·외교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FTA를 활용하고 있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FTA 정책 기조는 현재의 정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ASEAN과의 FTA, RCEP 및 한중일 FTA의 형성과정을 보아도 중국의 이러한 FTA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FTA 정책 기조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종래 중국은 ASEAN+3을 중심으로 한 EAFTA 창설을 통해 역내 패권을 강화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이후 이러한 전략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부분적으로 협력하면서 한중일 FTA, 그리고 중국이 반대해 왔던 ASEAN+6을 축으로 하는 RCEP를 수용하였다. 이는 중국이 ASEAN+3에 의한 EAFTA보다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TPP를 견제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단으로 RCEP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변화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가 발효되면 동아시아 지역 및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에 대한 경계감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중국은 TPP에 대해 ‘미국이 중국 및 인도 등에 대해 시장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TPP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TPP와 함께 미국과 EU 간의 TTIP에 대해서도 높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TPP와 TTIP는 중국에게 제2의 WTO 가맹과 같다’고 인식하고 있다(江原 2014, 45-46). 세계무역의 1/3, 세계 GDP의 약 1/2을 차지하는 TTIP가 발효되면서 새로운 국제무역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이 최근에는 한국, 호주, 스위스 등과 FTA를 체결하는 등 시장개방과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6) 중국의 FTA 정책과 관련해서는 Wang Min(2011, 29-48)과 江原規由(2014, 45-46)의 논의 참조.

그러나 중국이 바로 TPP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현재로서는 지적재산권 문제, 경쟁정책에서의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쟁조건의 균등화, 국제노동기준 및 환경규제 문제 등 중국의 입장에서는 TPP 참가 장벽이 너무 높다고 하겠다. 중국의 경우 상해협력기구(SCO)를 기반으로 하는 ‘일대일로’ 건설, 미국과 BIT 체결의 행방, 그리고 ‘상해 자유무역 시험구’(2013. 9) 등이 향후 중국의 FTA 정책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하겠다.

(3) 일본의 FTA 정책

일본의 통상정책은 GATT/WTO 체제하에서 다국 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축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층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하였다.⁷⁾ 이러한 정책전환은 국내외 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내부개혁의 부진과 이로 인한 FTA 체결이 부진한 탓에 일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으나 자유화 수준 등 내용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일본은 국내 농업 등의 보호를 위해 FTA 상대국도 미국 등의 선진국보다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뒤쳐진 FTA 체결을 만회하기 위해 2국 간 FTA뿐만 아니라 거대 FTA 협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2010년 내각회의에서 호주 등 2국 간의 FTA와 함께 한중일 FTA,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 등 FTA 정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은 ‘일본부흥 전략’의 한 축으로 FTA를 통한 ‘세계적인 경제연계의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2국 간 FTA 협상뿐만 아니라 거대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FTA 국가들과의 교역비중을 현재의 22.6%에서 2018년에는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통상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미국이

7) 일본 통상정책의 전환 배경 등에 대해서는 石川幸一(2011, 138-154)과 김봉길(2011, 1-76)의 논의 참조.

제안한 TPP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의 제도적 경제권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를 우선하여 2013년 3월에 TPP 협상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의 TPP협상 참가는 그동안 경쟁국에 비해 부진했던 FTA 체결을 가속화하면서 국내개혁 등 여러 가지 현안을 동시에 타개하고자 하는 다목적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 할 정도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 내부 성장동력 상실, 동 일본 대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경제의 돌파구로 TPP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TPP 참가는 실제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비해 불리한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을 만회할 수 있고, EU와의 FTA 협상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일본 재계도 산적한 국내개혁을 촉진하는 등 일본경제 활성화에 TPP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정부에 TPP 참여를 촉구하였다. 일본 상공회의소는 'TPP협상 조기 참가에 대한 견해'(2011. 9)에서 국내적인 구조개혁의 지연과 국제적인 경쟁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TPP 협상에 가능한 빨리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FTA 정책을 보면, 현재 합의에 도달한 TPP와 협상 중인 EU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으로 동아시아에서의 RCEP, 한중일 FTA 협상을 추진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嶋 2015, 12-39). 그러나 TPP와 함께 RCEP, 한중일 FTA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통상전략은 미국주도의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RCEP, 그리고 한중일 FTA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층적인 전략을 취하면서, 동아시아 지역과 환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을 활용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현재 TPP와 RCEP와 같은 거대 FTA 협상에 동시에 참가하여 중개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일본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양 FTA 협상에서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PP와 RCEP를 잘 조정하면서 FTAAP에 수렴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IV. 거대 FTA와 한일관계의 재구축

1.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제도적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2010년대에 들어와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을 위한 움직임을 보면, ASEAN+1을 중심으로 하는 양국·지역 간의 FTA에서 거대 FTA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이 경제적인 목표와 함께 정치·안보상의 목표가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역사인식 문제,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금년 11월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재개되는 등 3국 간의 긴장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는 하나, 완전한 회복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겠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정치·안전보장 측면에서의 긴장관계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협조와 경쟁의 게임이 TPP와 RCEP를 통해 전개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도 이러한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향후 한일관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이러한 지정학적·지경학적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한국과 일본은 TPP와 RCEP, 그리고 한중일 FTA 등 거대 FTA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협조와 대립이라는 이중구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전략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지경학적인 환경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대개 아래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동아시아의 핵심국인 한중일 사이에 지속되고 있는 역사인식 문제,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가 중국의 급부상과 해양진출 등에 의한 주변국과의 마찰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관련한 동아시아

에서의 미국과 중국과의 헤게모니 쟁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의 문제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역내 힘의 균형이 이동하면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인식 문제, 영토분쟁과 관련한 갈등은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온 문제이기도 하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첨예하게 쟁점화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사 문제처럼 인식론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대일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야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3국 간의 갈등은 힘의 이동에 따른 포괄적인 구조적 대립의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동아시아 경제는 일본을 선두로 한 역내 투자와 무역의 연결고리를 통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러한 발전패턴이 붕괴되고, 역내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 간에 잠재되어 있던 이들 문제들은 전후 국교정상화 혹은 국교 회복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중국 간에 일부러 애매하게 해두었던 문제들이다. 일본이 역내 주도권을 쥐고 있던 동안에는 이러한 갈등이 잠재되어 있었으나, 일본의 주도권이 약화되면서 정치문제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3국 간의 경제상황을 보면, 명목 GDP 규모에서는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였고, 한국의 경우도 급속히 일본을 추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래 한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이는 한국의 대일 의존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일본에 의존하는 후진국 아니다. 일본의 명목 GDP 규모는 10년 전에 한국의 6배였으나 2014년에는 3.3배로 줄어들었고, 무역적자 폭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의 문제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해양진출과 관련한 주변국들과의 마찰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함께 국력이 커짐에 따라 남지나해, 동지나해, 황해 등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면서 지역패권을 강화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자국중심의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ASEAN과 ‘남지나해 행동선언’(2002)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지나해 주변을 개발

하는 등 실질지배를 추진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과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의 영토 문제에 관해서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양측 모두 현상변경을 물리적 행동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어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정 국가의 독점지배를 방지하고, 아시아로 회귀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열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조성하려는 미국의 역외 균형전략과 마찰을 피하기 어렵다. 중국의 대두는 주변 관계국에 기회와 위협의 양면성을 지니는 지정학적인 변화라고 하겠다. 한국과 일본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두 측면을 고려한 균형을 모색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중국과 주변국들과의 대립은 제도적 경제권 형성과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하려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미국과 중국과의 안전보장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이중구조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연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to Asia) 정책’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의 제2기 정권 발족과 동시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선언하였다.⁸⁾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 강화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 FTA 등 2국 간 자유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TPP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요한 경제적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TPP 전략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제도적 경제통합의 저지, 동아시아 시장 접근, 그리고 대 중국 포위망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강화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확대와 경기회복을 위해 수출배증 계획과 고용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의 확보를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또한 일본을 TPP에 참가시킴으로써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경제통합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안전보장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8)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Philip. C. Saunders (2013, 2-3)의 논의 참조.

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하겠다.⁹⁾ 특히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보면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군사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미일, 한미 동맹의 강화’와 ‘양호한 미중관계의 구축’이라는 전략이 병존하고 있다(馬田 2015, 12). 다시 말해 최근의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보면, 무역이 급증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정치·안전보장 측면에서는 대립이 심화되는 ‘협조와 대립의 이중구조’가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중관계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정치·안전보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는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발전 격차에 따른 역내 파워이동이 가져온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갈등의 표면화, 그리고 국제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국가와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는 국가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의 심화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국제질서와 권익을 유지해 왔던 패권국가 미국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왔던 일본이 세계 경제질서의 구조변화에 직면하여 자국의 헤게모니를 지키려고 하면서 새로이 부상하는 중국과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2. 거대 FTA와 한일관계의 재구축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지경학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동지역에서의 신 통상질서 수립을 위한 지역경제 통합의 움직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수립과 관련한 움직임의 특징이 역내 무역자유화라는 경제적인 목표가 역내 정치·안전보장의 목표와 함께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아시

9)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4월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새로운 톨(TPP)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톨을 만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 및 농업은 퇴출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고용상실을 의미한다”라고 위기감을 표명하였다.

아 재균형 정책과 TPP의 배후에 있는 경제적·전략적 목적, 그리고 RCEP의 형성·발전 과정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TPP와 RCEP라는 거대 FTA의 과정을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에 의한 ‘작용·반작용의 동학’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TPP와 RCEP는 최종적으로는 FTAAP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현재 두 거대 FTA가 보완적인 관계보다는 대체적인(경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FTA 간의 융합 가능성은 품목별 자유화 스케줄의 조정이 관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TPP와 RCEP는 자유화 대상품목 및 자유화 수준 등에 대한 내용이 너무도 상이하여 양자의 통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다.¹⁰⁾ 다만, 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 태국, 필리핀 등 APEC 가맹국을 중심으로 TPP 참가국이 증가하면 중국, 인도 등도 TPP에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이는 RCEP가 TPP에 흡수 통합되는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RCEP의 경우도 TPP 협상이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중국이 RCEP와 한중일 FTA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TPP와 비교해 RCEP가 상대적으로 자유화 수준이 낮아 아세안 각국이 합의에 도달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RCEP 협상도 예상보다 빨리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의 움직임은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분업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 인도, 태국 등이 TPP에 참가하지 않고, FTAAP의 체결에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 TPP와 RCEP라는 거대 FTA와 2국 간 FTA가 병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복잡한 관세인하 스케줄, 원산지 규정 등이 병존하게 되어 FTA를 이용하는 기업의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동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의 경우, II절에서 고찰한 것처럼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역내 생산네트워크와 공급사슬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역내 기업들은 역내 생산네트워크와 공급사슬의 효율화를 위한 경제통합에

10) APEC가 두 거대 FTA의 중개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의도 있다(石川 2012, 84-85).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역내 생산네트워크와 공급사슬을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나 지나치게 제한적인 원산지 규정 등은 거래비용을 높이고, 가치사슬을 최적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므로 차별적 규정을 완화할수록 유리하다. 각국이 TPP와 RCEP와 같은 거대 FTA를 추진하는 경제적 배경에는 이러한 국제 분업구조와 통상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자유화율이 높고, 대상범위가 넓은 FTA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고, 당연히 TPP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된다. TPP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와 거래하는 기업은 2국 간 FTA 및 RCEP를 이용하게 되나, TPP에 비해 자유화율이 낮고 대상범위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TPP 참가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시 말해 TPP와 RCEP에 의해 이미 동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기업의 생산네트워크나 공급사슬이 TPP 가맹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기존의 생산네트워크나 공급사슬이 분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역내 공급사슬 및 생산네트워크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한국과 일본 기업은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TPP 가맹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한국이 TPP 참가를 결정한 상태에서 중국이 TPP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구축해 온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역내 공급사슬과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재편되면서 역내 분업구조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하여 가공·조립한 최종 제품을 유럽과 북미 등으로 수출하는 분업구조가 우위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거대 FT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전략적 요소도 중요한 변수라고 하겠다. 즉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수립을 위한 거대 FTA를 추진함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국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미국주도의 TPP 협상에 참여한 이후 RCEP 및 한중일 FTA 등과 같은 미국을 배제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제도적 경제권 수립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2014년 11월 북경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중국의 제안으로 FTAAP 체결을 위한 ‘북경로드맵’ 작성이 합의되어, 2016년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¹¹⁾ 이처럼 중국이 FTAAP에 대한 로드맵 작성을 제안한 것은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 주도의 TPP를 중심으로 신통상규칙 제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FTAAP 실현의 주도권 확보, TPP 이외의 선택방안의 제시를 통한 TPP의 견제, ASEAN 가맹국들의 TPP 참가 견제 등의 다목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馬田 2015, 15-16). 미국도 전술한 것처럼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안전보장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이러한 지정학적인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동 지역의 경제·안전보장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동아시아 지역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적·지경학적인 이점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TPP와 RCEP의 통합을 견인하고, 지역의 안정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TPP와 RCEP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을 보면, TPP의 경우 GDP 23%, 무역 28%, RCEP의 경우는 GDP 29%, 무역 25%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두 거대 FTA의 통합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하루라도 빨리 기존의 참가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TPP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TPP 참가와 관련해서는 우선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TPP 참가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고립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개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실히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일본도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해 TPP와 RCEP를 연계하는 일본의 입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TPP 참여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TPP 참여가 사실상 한일 FTA의

11) FTAAP 체결을 위한 각료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투명성 향상, ② 능력 구축, ③ 분석 작업, ④ 로드맵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APEC (2014). “The Beijing Roadmap for APEC’s Contribution to the Realization of the FTAAP.” <http://www.apec.org>. (2014년 11월 11일 검색)

성격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한일 양국의 경제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와 정치의 안정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대중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중소득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동시에 개혁과 개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TPP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제적인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새로운 통상규칙 제정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역내 기업의 중국 이탈이 심화될 수 있고, 이는 중국 경제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우선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의 타결을 견인하고, 이를 통하여 중국이 국제적인 규칙제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나 공급사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일이 협력하여 TPP와 RCEP의 통합을 견인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도 한중 FTA에서는 제품무역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점차 개방을 확대하고 있고, 이는 향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도 개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게 되면, 이는 역내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구축을 통한 역내 안전보장 측면에서의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¹²⁾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면 정치적 대립에 의한 경제적 침체는 보다 많은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정치적 대립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목표와 안전보장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대립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일이 협력하여 역내 경제통합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 국가 간의 경제협력과 안전보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多胡淳(2013, 54-63)의 논의를 참조.

V. 결론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질서 형성을 위한 패권 경쟁에 의해 정치·안전보장 측면에서의 긴장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을 위한 거대 FTA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TPP와 TRCEP의 출범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질서 형성은 보다 거시적 차원의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의 틀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대 FTA 등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고, 동시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내 구조변화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고찰한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통상질서 수립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과 협력의 틀’ 속에서 새로운 한일 협력관계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일 양국이 지정학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TPP와 RCEP의 통합을 추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동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부품, 소재 등의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역내 생산네트워크와 공급사슬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역내 기업들은 경제통합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 한국, 태국 등 TPP 참가국이 늘어나면 기업들은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TPP 가맹국으로 이전하게 되고, 지금까지 구축해 온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역내 생산네트워크와 역내 공급사슬, 그리고 역내 분업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는 중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되고, 한국과 일본 경제에도 타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미국과 중국을 중재하면서 TPP와 RCEP를 통합하여 FTAAP를 견인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이 TPP에 참가하여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TPP와 RCEP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GDP 및 교역규모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등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일 양국은 정치·안전보장 측면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중국과는 대립하는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상호 의존관계를 심화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을 중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TPP와 RCEP가 세계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한중일 FTA와 RCEP 체결을 견인하고, 이를 통하여 중국이 국제적인 규칙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거대 FTA가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이 패권주의와 민족주의에서 탈피하여 역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패권국가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역내 제도적 경제권 형성과 역내 번영을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 지도자가 근시안적이고 정권유지를 위한 민족주의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구축을 통한 역내 번영과 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부상은 한국과 일본에게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의 내셔널리즘을 자제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중개국(Hub country)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경제·안보의 양면에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향후 한일 양국 사이에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도 양국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및 다국 간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위상과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미·일·중에 의한 헤게모니 쟁탈전에 휘말려 한국이 존재감을 상실할 수 있다

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대 FTA가 경제적인 목표와 함께 정치·안전보장의 목표가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김도형 (2007). “한일 FTA 협상의 문제점과 재협상 조건.” 『경제논집』. 제46권. 제 2호. 서울대경제연구소, pp. 61-94.
- 김봉길 (2011). “일본 통상정책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대응방안.” 『일본연구』. 4 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pp. 1-76.
- 김정식 (2015). “한중일 갈등이 통화협력에 미치는 영향.” NWEAR. 『한일관계 이 령게 풀어나가』. 김영사, pp. 262-280.
- 사공목·신현수·박승록 (2013). 『한일산업협력패러다임의 변화와 과제』. 산업연구원.
- 江原規由 (2014). “中國のFTA戰略の行方.” 『國際貿易と投資』. No. 97. 國際貿易投 資研究所, pp. 45-46.
- 多胡淳 (2013). “經濟連携と安全保障.” 『日米中心体制と環太平洋經濟協力の行方』. アジア太平洋研究所資料. 13-03, pp. 1-79.
- 嶋正和·麻野良二 (2015). “メガFTAがもたらす自由貿易經濟における海外戰略.” 『貿 易と關稅』. 日本關稅協會, pp. 12-39.
- 馬田啓一 (2015). “變容するアジア太平洋の秩序渡日米中關係の行方.” 『國際貿易と 投資』. No. 100. 國際貿易投資研究所, pp. 4-20.
- 石川幸一 (2011). “日本のFTA戰略: 現狀と課題.” 馬田啓一·浦田秀次郎·木村福成 (編著). 『日本の通商政策』. 文眞堂, pp. 138-154.
- _____ (2012). “TPPと東アジアの地域統合のダイナミズム.” 『國際貿易と投資』. No. 97. 國際貿易投資研究所, pp. 74-89.
- APEC (2014). “The Beijing Roadmap for APEC’s Contribution to the Realization of the FTAAP.” <http://www.apec.org>. (2014년 11월 11일 검색)
- Athukorala, Prema-chandra & Nobuaki Yamashita (2006). “Production fragmentation and trade integration: East Asia in a global context.” *Nort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Vol. 17. No. 3, pp. 233-256.
- Ernst, Dieter & Boy Luthje (2003). “Global Production Networks, Innovation and Work: Why Chip and System Design in the IT Industry are Moving to Asia.” *East-West Center Working Papers*. No. 63. East-West Center, pp. 1-15.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00-2014).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 Kim, Bonggil & Igawa Kazhiro (2005). “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

- Strategic Aspects for Japan.” In Ann, Baldwin & Cheong (eds.).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Netherlands: Springer, pp. 21-36.
- P. A. Petri, M. G. Plummer (2014). “ASEAN Centrality and ASEAN-US Economic Relationship.” *Policy Studies*. No. 69. East-West Center, pp. 1-77.
- Philip. C. Saunders (2013). “The Rebalance to Asia: US-China Relations and Regional Security.” *INSS Strategic Forum* No. 281. August, pp. 1-16.
- Wang, Min (2011). “The Domestic Political Economy of China’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Vinod K. Aggarwal & Seungjoo Lee (eds.).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Domestic Institutions*. Germany: Springer, pp. 29-48.
-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ITS). <http://wits.worldbank.org>. (2014년 11월 20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5년 11월 09일 |

| 논문심사일 : 2015년 11월 25일 |

|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14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2, No. 4 (2015)

Movement of Mega-FTA in the East Asia Region and Reestablishment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Bonggil Kim

(Faculty of Economics, University of Toyama)

This study examine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East Asia region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new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Japan in conjunction with movements towards creating a mega FTA in the East Asia region. In situation when the formation of new trade rules in the East Asia region proceeds at full speed towards the mega-FTA, it is a main issue how Korea and Japan build close relationships with respect to TPP and RCEP.

Korea and Japan should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ongoing structural changes in the new trade regime, so that both countrie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its formation process. In addition, Korea and Japan should seek for a new way to build up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establish a strategy for this purpose. Due to the close inter-connection in the East Asia region through the intra-regional production network and the supply chains, Japan and Korea should utilize their geopolitical superiority for integrating RCEP and TPP. To achieve that goal, Korea should participate in TPP and build up a close cooperation relationship with Japan.

In particular, due to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PP and RCEP for establishing the new international trade rule in the world, we will

know how the strategic alliance of Korea and Japan could pull the integration of TPP and RCEP. As for the Mega-FTA, because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regional security in the East Asia region, Korea and Japan must make a political decision to rebuild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m.

To achieve this goal in the future, Korea and Japan should make more effort for improving their relationships, and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find a way to take advantage of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

- Key words: Mega FTA, Reestablishment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PP, RCEP, FTAAP